정당 사상 첫 완전국민경선 성공…'반문정서'도 작용한 듯

국민의당 호남 경선 '흥행 대박' 이유는?

투표자수 예상치 2배 초과
'손쉬운 선거' 자발적 참여
민주당 견제심리도 표출

국민의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정당 사상 처음 도입한 완전국민경선제도가 호남(광주·전남·북, 제주)에서 10만명에 가까운 경선인단이 참여하는 등 '대박 흥행'을 일으키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야권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호남에서의 여론 변화는 민주당 대권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국민의당 대선 경선은 '사전 선거인단 없는 현장투표'라는 점에서 '조직 동원' 등의 우려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경선과 겹치면서 사실상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호남 경선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이를 말끔히 해소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국민의당 대선 경선의 '흥행몰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경선인 25일 광주·전남·제주 지역에서 예상치 2만~3만명의 2배가 훨씬 넘는 6만2389명이 투표했다. 이어 26일 전북 경선에서도 투표자 수가 3만 375명에 이르러 당초 예상치인 1만5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려했던 '박스 떼기 차떼기'로 볼만한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광주의 경우 투표소가 겨우 5곳에 불과한 데다 투표소가 대부분 공공기관을 이용했던 만큼 버스 등을 이용한 인력동원을 하면 즉시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투표자가 유독 많아 특정 캠프의 인력동원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투표참여가 많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이는 '손쉬운 선거' '간편한 주권 행사'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참여형 실험'으로 승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회사원 정모(52)씨는 "TV를 시청하던 중 집 인근에서 국민의당 경선이 있다고 해서 대학생인 딸과 함께 투표소로 왔다"면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고, 내 손으로 대통령 후보도 뽑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생활 정치'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호남 경선의 흥행 동력으로 여전한 호남 반문(反文) 정서가 작용했다는 점과 민주당에 대한 호남지역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전략적 판단으로 꼽고 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전두환 표창' 발언과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의 '부산 대통령' 발언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국민의당과 안철수 적극 지지층과 '샤이(shy) 국민의당' '사이 안철수' 지지층이 고개를 들고 움직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국 첫 순회경선이 지난 25일 광주·전남·제주 지역에서 열렸다. 이날 후보 연설이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선 후보인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후보(왼쪽부터)가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재인 과반 득표 결선투표 없이 본선갈까?

오늘 민주당 호남 경선 관전포인트

안희정·이재명 '과반 막기'
결선투표 대역전 노려
국민의당 흥행도 변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호남 순회경선이 26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광주에 집중되고 있다.

◇'文 과반' 가능할까=문 전 대표 측에서는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과반 득표를 하면서 사실상 전체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전략이다. 호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경우 1차 전국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달성,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결선투표가 없으면 국민의당보다 하루 앞선 4월3일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다. 다른 당 후보가 모두 결정된 다음에는 지금처럼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잣대 외에도 '어느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높은가' 등 다른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 지사와 이 시장으로서는 문 전 대표의 과반 저지가 최대 목표다. 물론 문 전 대표를 앞지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적어도 과반 득표를 막는다면 '대세론'에 균열을 내면서 반문재인 정서를 자극, 결선투표를 통해 대역전극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지사와 이 시장은 호남에서 1위를 차지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의미있는 2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차선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안 지사의 경우 다음 순회경선지가 지산의 '안방'인 충청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안 지사가 호남에서 격차를 좁히고 2위를 차지한다면 충청도민들의 몰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 측에서는 35% 득표를 목표로 잡으면서, 호남에서 2위를 이 시장이 차지하면 가장 극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여론조사 수치만 보고 안 지사의 2위를 예상하던 지지자들이 호남에서 이 시장이 2위를 할 경우 깜짝 놀랄 것이고, 경선 전체에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다.

◇국민의당 경선 흥행 변수되나=국민의당이 호남경선에서 대흥행을 거두고 안철수 전 대표가 완승을 한 것을 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들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 대권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선두 주자인 문 전 대표 측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강자 쏠림' 현상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서 대세론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 지사와 이 시장 측은 호남에서 국민의당 경선 흥행은 그동안 숨죽여 있던 반문재인 정서의 표출이라면서 대세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고무된 표정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조기대선 '수퍼 위크'…4당 대선후보 주중 윤곽

'5·9 장미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각 정당별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중 본선에 진출할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우선 바른정당은 26일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 국민정책평가단 투표(40% 반영)를 마감했다. 27일까지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모두 끝낸 뒤 오는 28일 지명대회에서 대의원 3000명의 현장투표 결과까지 합산해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전당대회에서 4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26일 전국의 231개 투표소에서 책임당원 현장투표를 실시하고 29~30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한다. 책임당원 현장투표와 여론조사는 각각 50% 비율로 반영된다.

더불어 민주당은 27일 호남을 시작으로 충청(29일), 영남(31일), 수도권·강원·제주(4월 3일) 등 순회경선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4월 3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후보 선출이 확정되고, 결선투표를 실시할 경우 8일 후보가 결정된다.

국민의당은 지난 25일 광주·전남·제주와 26일 전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안철수 후보가 강고한 대세론을 형성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28일 부산·울산·경남, 30일 대구·경북·강원, 4월 1일 경기, 2일 서울·인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4일 대전·충남·충북·세종에서 투표를 마친 뒤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임동욱기자 tuim@

대선 예비후보만 18명 등록…난립 조짐

정당소속 9, 무소속 9명
마감까지 30명 넘을수도

지난 10일 5·9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26일 현재까지 무려 1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무효 처리된 2명을 포함한다면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2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매일 최소한 1명 이상씩 등록을 한 셈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예비후보 등록 마감시한인 4월 14일(후보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 인원이 30명이 넘어서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예비후보 중 당적을 가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박주선 국회부의장,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외 늘푸른한국당 이재오·민중연합당 김선동·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 등 9명이다.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가 없다. 앞서 등록했던 한국당 소속 주자들이 경선 탈락 후 등록무효 처리가 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9명의 예비후보는 모두 무소속이다. 이중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무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대다수다.

직업별로도 전기기술자, 역술인, 원예학 박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 등이 정치권과는 거리가 있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얼굴을 내밀었던 군소 '단골후보'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묻지마 등록'은 당선 가능성 보다는 예비 후보 등록을 통한 '이름 알리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자 난립에 따른 유권자 혼란과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대 대선 예비후보 기탁금은 6천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이다. 공직선거법 57조(기탁금의 반환 등)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소속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등록 무효 처리가 될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는 무소속 예비후보를 포함해 예비 후보자가 중도에 자진해서 사퇴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별 당내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등록 무효가 이어지고 예비후보 가운데 상당수는 공식 후보 등록에 필요한 3억 원의 기탁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할 만큼의 혼선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